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9. 12. (제 회)	

지역발전 5개년계획(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제 출 연 월 일	2009. 12.

1. 의결주문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2009년~2013년)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계획수립의 경과 및 성격

-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발표('08.9월)이후 '08년 12월부터 '09년 10월까지 중앙부처와 “5+2”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중앙정부,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및 지자체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기관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국가계획으로 수립하였음

나.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를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 4대 부문별 계획과 “5+2” 광역경제권별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작성

- 4대 부문별 계획으로 i) “5+2” 광역경제권 구축, ii)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형성, iii) 4+α 초광역개발권 구상, iv) 지방분권·규제합리화를 추진

다.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내용

- “5+2”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하여 선도산업, 인재양성, 선도 프로젝트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광역경제권 발전 위원회” 주도로 발굴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지원
-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형성을 위하여 도시형, 도농 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고 성장축진지역·특수 상황지역 등 특성에 맞는 개발 지원
- 동·서·남해안, 남북 접경지역 및 내륙 벨트 등 4+α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벨트별 발전계획 수립
-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핵심규제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

라. “5+2” 광역경제권별 발전계획의 주요내용

- 광역경제권별로 특성 및 성장잠재력을 반영한 비전을 설정하고, 광역권 자원의 공동이용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

마. 추진체계 및 소요 자원

- 계획 수립과 재정운용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 총 투자소요 161조 560억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도입·운용, 지방의 가용자원 확대, 민자부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함

나. 예산조치 :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붙임 :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

2009. 12.

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목 차]

I. 계획의 개요 1

1. 수립 배경

2.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체계

II. 비전과 전략 5

III. 부문별 발전계획 6

1. 광역경제권 구축 : 성장 잠재력 확충

2. 기초생활권 형성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초광역개발권 구상 : 개방·협력의 촉진

4. 지방분권·규제 합리화 : 지역주도·상생발전

IV. 5+2 광역경제권발전계획 23

1. 충청권

2. 호남권

3. 대경권

4. 동남권

5. 수도권

6. 강원권

7. 제주권

V. 계획의 실행과 관리 30

1. 추진체계

2. 자원소요

3. 평가체계 구축

VI. 지역발전의 미래상 33

I. 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 광역경제권의 중요성 등 대내외 여건 변화

- 세계화 진전, 지식기반경제 이행 등으로 국경보다 **지역이 강조**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한 **광역경제권의 중요성** 부각

* (영국) 42개 카운티를 9개 광역 RDA로 광역화 (프랑스) 96개 데파르망을 22개 레지옹으로 재편 (일본) 47개 도도부현을 8개 구역으로 개편

- 정보통신 및 교통 인프라의 발전, 부문간 융·복합화 추세 속에 **수평적 연계협력** 및 **개방형 네트워크** 강조

□ 과거 지역발전정책의 평가

-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 산술적 균형에 집착한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유사·중복 지원 등 **비효율성 초래**
- 중앙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확보·단순집행에 치중하여 **지역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 지역발전** 제약

□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광역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특성화된 지역발전**, **분권과 자율**,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등이 강조

* 최근 선진 각국은 균형발전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전환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이명박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

< 전환기의 세계적인 지역발전정책 동향 >

□ 지역간 연계·협력 및 통합적 개발의 활성화

- 지역간 연계·협력으로 새로운 발전과 통합의 전기를 마련
- 예시: 독일과 체코의 Vogtland 지역협력 사업, 동아시아의 국경을 초월한 Beijing-Seoul-Tokyo 벨트 등

□ 광역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 광역 RDA로 광역화(RDA법, '99년), 프랑스는 96개 데파르망을 22개 레지옹으로 재편('82년)
-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8개 광역지방계획 구역으로 개편(국토형성법, '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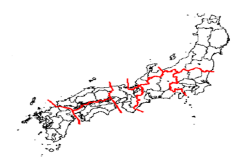
<영국>



<프랑스>



<일본>



□ 도농통합과 행정구역의 개편 추진

- 도농통합과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및 삶의 질 개선 도모
- 예시: 일본 시정촌 합병(3,232/'99 → 1,821/'06 → 1,760/'10), 영국 Greater London Authority(런던시 + 32개 시구 통합)

□ 지역발전정책의 연성화와 다양화

- 전통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창조산업 등으로 성장동력 다변화
- 도로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의료, 보건, 문화, 지역 브랜드 등 지역발전의 소프트웨어적 요소 중시

2. 계획의 성격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중앙과 지역이 협력·추진**할 지역발전과제를 총망라한 **종합계획**

□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

-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 균특법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육성, 인력양성·과학기술진흥, 발전거점·SOC, 문화관광 육성 등 분야별 정책의 체계화

□ 예산과 연계한 5년 단위('09~'13)의 중기 실행계획

-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이며,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성 강화

□ 중앙, 지역,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공동 협력계획

- 중앙부처,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 관련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

< 舊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차별성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04~'08)	지역발전5개년계획('09~'13)
배경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전격차 심화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초	· 지역균형발전의 추구	·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
·	· 기계적·산술적 균형정책 강조	· 연계·협력에 기반한 광역화 추구
특성	· 시도 행정단위를 계획단위로 설정	· 기초, 광역, 초광역을 계획단위로 설정

3. 계획의 체계 및 수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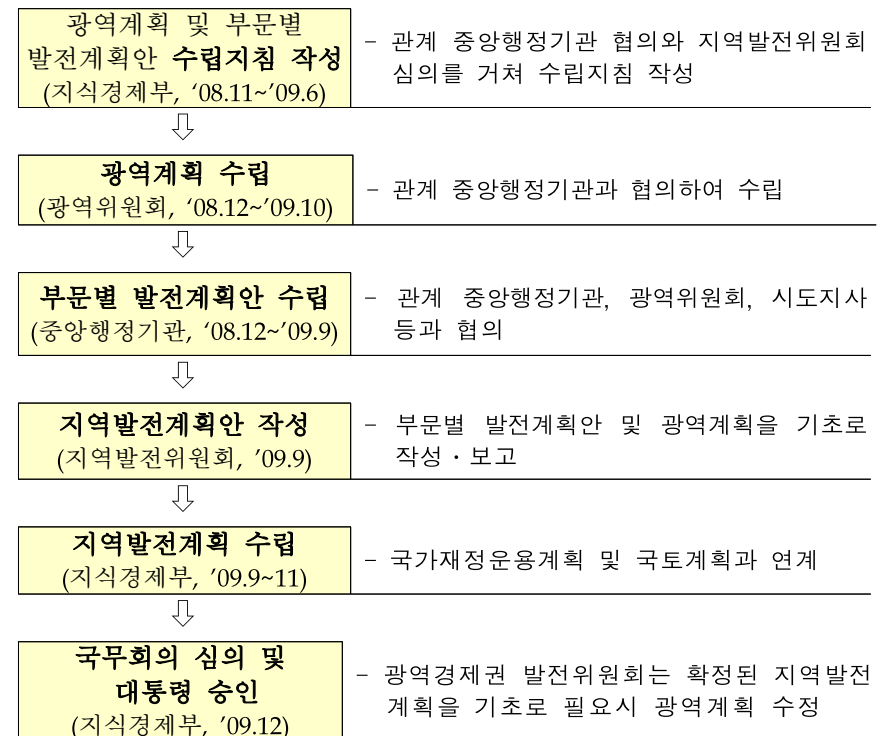
- 동 계획은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광역계획)**”을 기초로 수립

- 지역관련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법)**, **국토계획(국토기본법)** 등 타 계획과 연계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

-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개최, 산업·인력·SOC 등 다양한 신규 연계·협력 사업 등을 담은 **광역계획 심의*** 추진

* 제주(7.30), 강원(8.4), 대경(8.31), 충청(9.21), 수도(10.5), 동남(10.6), 호남(10.15)



II.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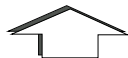
-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



부문별 계획 : 4대 발전전략

- ① “5+2” 광역경제권
⇒ 성장 잠재력 확충
- ②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③ 4+α 초광역개발권
⇒ 개방·협력의 촉진
- ④ 지방분권·규제 합리화
⇒ 지역주도·상생발전

광역권별 계획 : “5+2”



- ◇ 법·제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09.4)
- ◇ 예산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09.6), 중기재정계획 수립('09.9)
- ◇ 추진체계 : 지역발전위원회('09.5),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09.8)

III. 부문별 발전계획

1. 광역경제권 구축 : 성장잠재력 확충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 강원, 제주권

- “5+2” 광역경제권 자원 공동이용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인력 및 SOC 분야별 선도 사업 추진

S/W 사업	H/W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권별 2개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육성(3년 0.9조 + 2년 1조) * 수출액 : 10억불('09) ⇒ 100억불('13) ◇ 선도산업별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우수인재 양성(3 + 2년 5천억원) * '09~'13년 연간 약 2만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 간선도로망 구축 및 철도 복선화 등 30개 프로젝트 지원 (5년간 50조원)

추진전략	추진방안	주요과제	추진 일정				
			'09	'10	'11	'12	'13
광역권 선도 사업	선도산업	선도산업 선정 및 지원단 구성					
		광역권별 선도산업 육성					
		중간평가(3년 시행)후 후속 진행					
	인재양성	인재양성센터 선정					
		광역권별 우수인재양성					
		중간평가(3년 시행)후 후속 진행					
	선도 SOC	선도 SOC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선도 SOC 인프라 구축					
		선도 SOC 운영 활성화					

- 지역내 인프라와 R&D성과의 광역적 공유를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주도로 발굴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지원
 - 지역간 연계·협력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으로 지원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운영
 - 일반 제조업이외에 지식서비스, 산업간 융합화 분야 및 문화콘텐츠 등으로 확대 ('10년 예산 500억원)

가. 지역산업 육성

□ 광역경제권 차원의 지역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광역 선도산업의 집중 육성,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발전기반 확충, 광역권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등 지원 확대,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활성화, 지역투자 박람회의 정기적 개최

□ 지역산업 거점을 토대로 성장역량 확충

- 산단 클러스터사업의 광역화와 노후산단 재생사업, 구조 고도화 및 신규산단 조성·공급

나. 지역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양성

- 광역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양성, 대학간 자율 경쟁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모델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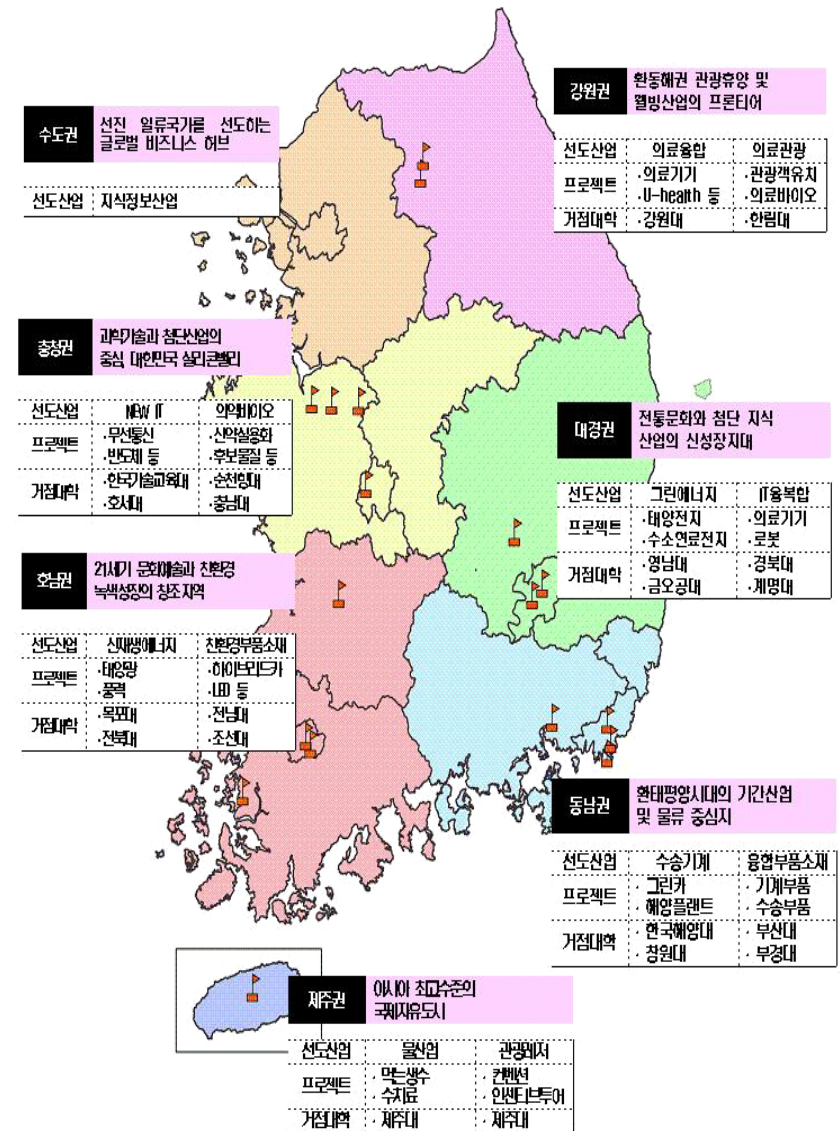
□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강화

- 우수 이공계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지역 R&D사업 효율성 강화 및 대덕특구 등 지역의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확대

□ 산·학·연 연계 활성화

- TP, 지역특화센터, RIC, 산학협력중심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기술지원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공동 R&D의 광역화

광역경제권(5+2)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대학



다. 교통물류망 확충 및 지역발전거점 육성

□ 대외개방·국제교류 거점 육성

- 신규 경제자유구역(대구·경북, 황해, 새만금)의 기반시설 확충, 기존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의 투자환경 개선
- 세계시장 진출의 전초기지인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울산·김제의 신규조성 및 기존 마산의 확장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4+1산업(관광·교육·의료·청정1차 및 첨단산업)의 집중 육성

□ 성장거점의 자족성 강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강화

-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세종시·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를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적 성장거점으로 육성

□ 新성장기반의 체계적 지원

- 새만금 종합 실천계획 및 수질환경대책 마련을 先추진하고,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 인프라의 확충을 본격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내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등을 통한 기초과학 연구거점 조성 및 비즈니스 융합 추진
- 충청권 및 대경권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 의료 응용·개발분야 의료기기 인프라 구축

□ 광역경제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인천 지하철 2호선,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 (충청권) 세종시, 대전-세종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동서4축 고속도로(음성-충주-제천)

- (호남권) 새만금 개발,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광주외곽순환도로
- (동남권) 경전선 복선전철(부전-마산, 진주-광양),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동북아 제2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
- (대경권) 동서5축(영주-울진) 및 동서6축(상주-영덕) 간선도로, 3대 문화권 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 (강원권)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남북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경기-광주-원주)
- (제주권)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라. 지역문화·관광 육성

□ 관광기반 선진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생태·녹색관광 인프라 조성,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관광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전시 컨벤션 시설 확충 등

□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조 및 자생력 강화

- 광역권별 특성화된 비엔날레 등 문예예술 행사 및 교류지원, 자생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추진
- 품격있는 문화 중심도시 조성,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문화산업연구센터(CRC)를 통한 문화역량 강화

□ 스포츠의 산업적·지역경제적 가치 제고

-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 2011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2. 기초생활권 형성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초지자체 163개 시·군(자치구 제외) 중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 단일 또는 다수 시·군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 (추진전략) 기초생활권 자구노력에 대응한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전단계·유형별 맞춤형 개발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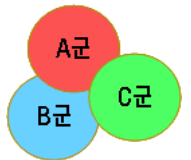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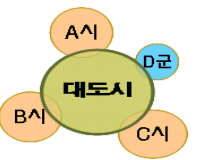
□ (10대 중점추진과제) 지역의 자조적 성장 잠재력을 발굴토록 5대 내발적 발전과제*와 주민의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토록 5대 국가적 지원과제**를 제시

* 내발적 발전과제 : ①지역 부존자원의 성장 동력화, ② 향토·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③역사·문화의 장소 마케팅, ④지역리더의 활성화, ⑤지역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 국가적 지원과제 : ①지역의료·복지 여건 개선, ②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③ 지역교육의 활성화, ④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⑤ 지역의 녹색성장

□ (지원체계) 중점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가지 유형별 맞춤형 지역개발, 여건불리지역 차등지원,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기초생활권의 3가지 유형>

구분	농산어촌형	도농연계형	도시형
개발 방향	인접 郡 지역간 통합적 개발	중심도시와 농촌지역간 도농통합적 개발	대도시와 연계 광역도시권 개발
공간 구조	 <p><사례 : 영양-봉화-청송></p>	 <p><사례 : 목포-무안-신안></p>	 <p><사례 : 부산-김해-양산-밀양></p>

가. 지역의 내발적 성장 잠재력 발굴

□ 지역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 자연환경의 생태공원화, 생태탐방로 및 테마공원 조성 등 자연환경의 자원화

○ 공원구역 조정 및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기준 등 규제를 합리적 조정

*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건폐율, 높이제한)

* 관광거점지역에 대형크루즈선 유선장 설치한도 확대(3,250㎡→15,000㎡) 등

□ 향토·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특화품목, 전통음식 등 특색있는 향토자원의 지역브랜드화

○ 향토·특화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 향토산업·지역특구·지역연고산업의 개편과 소규모 창업 기회 확대

□ 역사·문화의 장소 마케팅

○ 역사유적(고도(古都), 서원, 향교 등)·근대산업유산(포천 폐채 석장 등)·문화예술인(경주 박목월 등) 등을 관광 자원화

○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지역소재 콘텐츠 1인 창조기업 발굴·지원

○ 생태관광인증제 도입 및 대표축제 명예졸업제 도입 등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 지역리더 활성화로 발전 동력 구축

- 새마을지도자회·새마을부녀회, 지역개발사업단, NGO 등 자생적 지역리더들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 동력화
- 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창조지역 발전기반 배양
- 시·군 단위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역량제고
* 장성군(장성아카데미), 장흥군(장흥학당), 진안군(마을단위 학습동아리) 등

□ 지역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의 자율적 통합 지원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50억) 추가지원, 지역발전사업 선정시 우대
- 기피시설은 선호시설과 동반입지·광역화 공동이용 및 입지지역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 연계·협력 추진실적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 차등지원

나. 주민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

□ 지역 의료·복지 여건 개선

- 취약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이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부재 43개 군에 응급의료기관 건립지원과 취약지 응급진료권(6개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낙도, 오지 등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u-Health 원격의료서비스 도입('10. 하반기)
-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확대, 빈곤아동을 위한 보건·보육·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 임대형 민간투자(BTL) 등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 및 복합화 유도
- 문화 바우처·사랑티켓 등 소외계층 수요별 특화지원
- 민·관 우수예술단체의 산간벽지,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의 주민대상 순회공연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민체육센터,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확충

□ 지방교육 활성화

-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확대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교 육성 등

□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농어촌공동체형 홈 조성 및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희망근로 집수리사업 추진
- 지방상수도 광역화(시범 2개소) 및 가뭄피해지역 우수율 제고
- 4대강 유역중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내 하수관거 정비(9,830km)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750개소)

□ 지역 녹색성장의 추진

- 도시지역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녹색 도시」로, 농산어촌지역은 청정에너지 생산 및 자원재활용으로 「녹색마을」 조성
- 도시숲 조성확대, 시민중심의 「나무은행」 확산으로 도심 녹화 확대
- 자전거 주차장 확대 및 산업 육성, 대중교통 연계망 구축 등 자전거 교통분담 지원(교통분담율 : 현 1.2% → 12년, 5%)

다.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유형별 맞춤형 지역개발

-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 유형별 특화개발
- 시·군 또는 2개 이상 시·군이 연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기초생활권 경진대회 개최

□ 여건불리지역 차등지원

- **성장촉진지역**은 도로·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시 전액 국고지원, 기타 사업은 보조율 상향조정(10%p) 특혜 부여
 - * 인구·소득·재정자립 수준 등을 고려 70개 시·군을 지정('09.6)
- **특수상황지역**(접경·도서지역)은 해상공원 구역조정 및 행위제한 완화, 공원계획 변경주기 개편 등 규제 발굴·개선

□ 포괄보조금제 도입·운영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직접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재원용도를 넓게 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운영**
 - 사업을 대폭 통합·단순화(200여개 세부사업 → 24개 포괄사업)

□ 평가 및 인센티브제 강화

- 사업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체계화**(평가자문단·전문평가기관 운영) 및 공정성 제고
- 평가결과 우수사업은 추가지원, 부진사업은 지원축소·중단 등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
- 차등지원 유형을 확대하고, 예산효율화, 연계·협력, 사업관리체계 개선 등 모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재원 집중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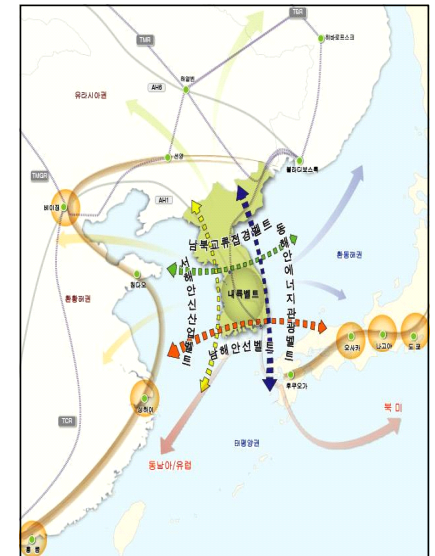
3. 초광역권 개발구상 : 개방·협력의 촉진

- ◇ 해안권과 접경 지역을 대외개방형 4대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
- ◇ 개발효과를 내륙으로 확산되도록 내륙초광역개발권도 설정

가. 5대 중점 추진 전략

□ 동북아의 초국경 개발·협력 기반 구축

- 동북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공항 등 **통합적 교통·물류망 확충 검토**
 - * 아시안하이웨이, 대륙철도망 연결 추진
 - ** 초장기적 차원에서 해저터널 등 물류 네트워크 구상 타당성 연구 추진
- 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의 주요 도시간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



〈대외개방 4대벨트 및 내륙벨트〉

□ 국토의 초광역 인프라 구축 및 거점간 연계 강화

- 초광역개발권내 및 권역간 기능적 연계와 상생발전을 견인할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구축**
 - * 동서남해안축과 동서축을 포함하는 'ㄱ'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상 검토
- 광역경제권 지역성장거점들을 연계하는 **초광역 성장지대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R&D 거점 등 성장거점을 연계·활성화

□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및 산업집적연계 강화

- 초광역권별로 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일류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 육성** 추진

* 남해안 : 조선·항공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화 / 동해안 : 에너지 산업
서해안 : IT, 반도체 등 첨단산업 / 접경지역 : 생태, 신소재 등

- 도서 및 자연경관, 생태·역사·문화자원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휴양·웰빙 관광벨트 개발 검토**

* 남해안 : 섬·해안·습지, 동해안 : 백두대간·역사문화, 서해안 : 갯벌·역사문화 등

□ 초광역 공유자원 및 문화권을 활용한 지역공동발전

- **4대강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변형 국토발전축 조성
- 백두대간 등 초광역적 공유·특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토기반 조성

-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관광·생태환경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나. 실천력 강화 전략

□ 중앙과 지방간, 권역내 및 권역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정책기획, 투자유치, 재원조달 등을 지원하는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및 과도한 규제 합리화

- **내륙벨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공원제도 등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다. 대외개방형 4대벨트 비전 및 개발방향

1 남해안 선벨트

비전과 개발방향

비전

수도권 대극(對極)의 동북아 新 경제·물류·휴양 허브

개발 방향

- ①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육성
- ②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로 조성
- ③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 ④ 남중권을 동서통합 상징지역으로 개발

2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비전과 개발방향

비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의 블루 파워 벨트

개발 방향

- ①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 ② 국제관광거점 기반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 ③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 ④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3 서해안 신산업벨트

비전과 개발방향

비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개발 방향	① 국제비즈니스 거점화와 환황해권 협력체계 활성화 ② 경쟁력 있는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③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④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4 남북교류·접경벨트

비전과 개발방향

비전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 육성”
개발 방향	①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②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③ 동서 - 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④ 남북한 교류협력 지구 조성 ⑤ 저탄소 녹색 성장지역 육성 * 남북관계 추이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4. 지방분권·규제합리화 : 지역주도·상생발전

가. 지역발전을 위한 新 거버넌스 구축

□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광역권내 시·도간 협력 조정 기구로서 **광역경제권을 대표**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별 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 광역권별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광역권내 실질적인 협력 도모를 위해 각계 대표 등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09.4.22 既 개정)

-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발전 주요**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균특법을 전면 개정

나. 지방분권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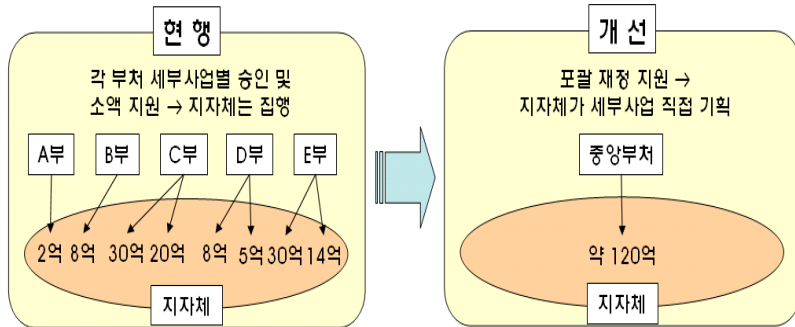
□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

- '10년부터 부가가치세 5%('10년 기준, 2.4조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확충을 연계
- 향후 10년간 매년 수도권 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수입 중 약 3,000억원을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 비수도권을 지원
-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09년 말로 종료(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운영 기한을 5년간 연장('14년말까지)

□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제도 활성화

- 군특회계 200여개 칸막이 예산배분을 24개로 단순화하고, 세부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포괄보조금 도입

<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운영 >



□ 인허가권 지방이양 확대

- 중앙부처의 각종 인허가권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

* 도시기본계획 수립,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 등을 지자체로 이양

다. 시장친화형 규제합리화

□ 적극적 규제완화 및 시장친화적 환경 구축

- 창업 등 기업활동 과정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친화형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산단 산업시설구역내 지식서비스산업 입주확대, 공장 여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등

< 참고 > 부문별 계획의 구현事例 중심

[1] 충청권 청주시 : 광역경제권 + 기초생활권

① 충청권 : 선도사업 + 기존 시·도 전략산업

- ◇ (산업) New IT, 의약바이오
 - * 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 / 의약바이오 연계, 신약 실용화
- ◇ (인력) 인재양성센터(4개 대학)
 - *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
- ◇ (SOC) 세종시 등



* 충남 전자정보산업 등 기존 시·도 전략산업 광역적 연계 지원

② 청주시 : 부문별 계획의 24개 포괄보조금 사업중 총 8개 사업 자율 편성

- 시·군·구 자율편성(1개) : 도시활력증진지역(주거환경개선)
- 시·도 자율편성(7개)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문예회관 건립),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2] 호남권 : 광역경제권 + 초광역개발권

① 광역경제권 : 선도사업 + 기존 시·도 전략산업

- ◇ (산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 * 태양광 산업, 풍력산업 / 광기술기반 융합, 하이브리드자동차
- ◇ (인력) 인재양성센터(4개 대학)
 - * 목포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 ◇ (SOC) 새만금 개발 등



* 광주 光산업 등 기존 시·도 전략산업 광역적 연계 지원

② 초광역개발권 : 4대 개방벨트 및 내륙벨트중 서·남해안 벨트에 해당

- 서해안 골드벨트 : 환황해권 국제비즈니스 중심거점 육성 등
- 남해안 선벨트 : 동북아 관광·국제물류·산업 허브 구축 등

IV. 광역권별 발전계획

1. 충청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	----------------------------

목표	IT·BT 산업의 핵심거점	과학기술 및 인재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기반 광역거점육성	첨단·문화· 환경 융합지역 창출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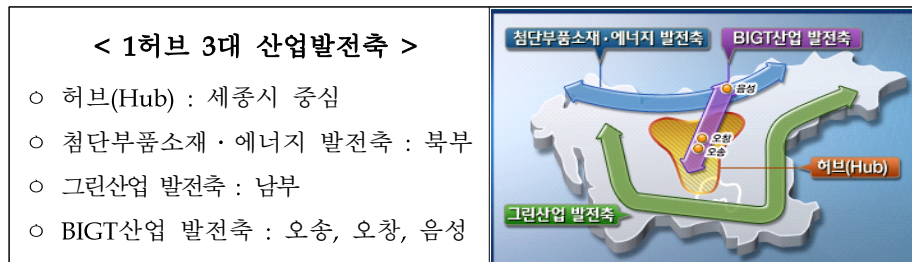
□ 특성 및 성장잠재력

- 28개 기초생활권 < 대전, 충남·북 > 서해안 골드벨트
- 대덕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 선도산업 : NEW IT, 의약바이오
- 인재양성 :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
- 선도SOC : 세종시, 대전-세종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동서4축 고속도로

□ 공간발전구상



2. 호남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	---------------------------

목표	친환경 녹색산업 거점 육성	문화예술과 해양·생태 관광 육성	지식창출 기능 고도화	통합인프라 구축	풍요롭고 살기 좋은 녹색공동체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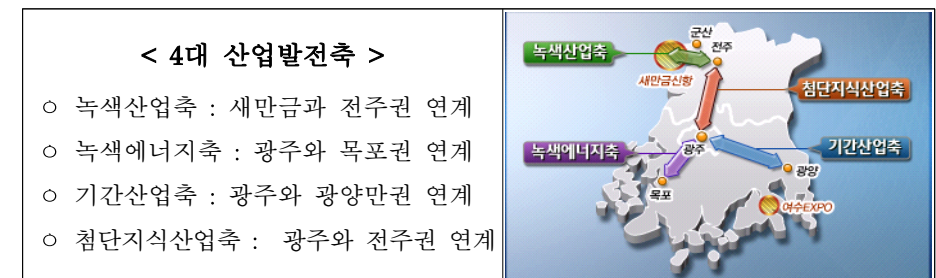
□ 특성 및 성장잠재력

- 36개 기초생활권 < 광주, 전남·북 > 서해안 골드벨트, 남해안 선벨트
- 새만금·광양 경제자유구역, 대불·군산자유무역지역, 무안공항, 광양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 선도산업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 인재양성 : 목포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 선도SOC : 새만금 개발,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 호남 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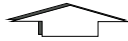
□ 공간발전구상



3. 동남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	------------------------



목표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과 융합기지화	물류·교통 등 신 성장벨트 구축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글로벌 경제 네트 워크 구축
----	-----------------------	----------------------	--------------------	--------------------

□ 특성 및 성장잠재력

- 22개 기초생활권 < 부산, 울산, 경남 >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블루벨트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마산 자유무역지역, 부산항, 김해공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 선도산업 :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 인재양성 : 한국해양대, 창원대, 부산대, 부경대
- 선도SOC : 경전선 복선전철, 동서8축 고속도로, 동북아 제2 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

□ 공간발전구상

< 4대 산업발전축 >

- 물류, 국제비즈니스축 : 부산대도시권
- 자동차, 조선축 : 울산대도시권
- 로봇, 기계, 해양플랜축 : 진해만 환상권
- 항공우주, 소재축 : 사천만 환상권

4. 대경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	----------------------



목표	녹색성장 기반구축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	지역간 상생네트워크	한국속 한국관광 구현
----	--------------	-----------------	---------------	----------------

□ 특성 및 성장잠재력

- 24개 기초생활권 < 대구, 경북 > 동해안 블루벨트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자유무역지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 선도산업 : 그린에너지, IT융복합
- 인재양성 : 영남대, 금오공대, 경북대, 계명대
- 선도SOC : 동서5축·동서6축 간선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3대 문화권 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

□ 공간발전구상

< G 1 산업발전축 >

- 생태환경축 : 백두대간 중심
- 문화경제축 : 낙동강 중심
- 지식기반축 : 구미~대구~포항 연계
- 해양연계축 : 동해안 중심

5. 수도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

목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	광역 발전거점 및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조성	법제도 및 기업 환경 개선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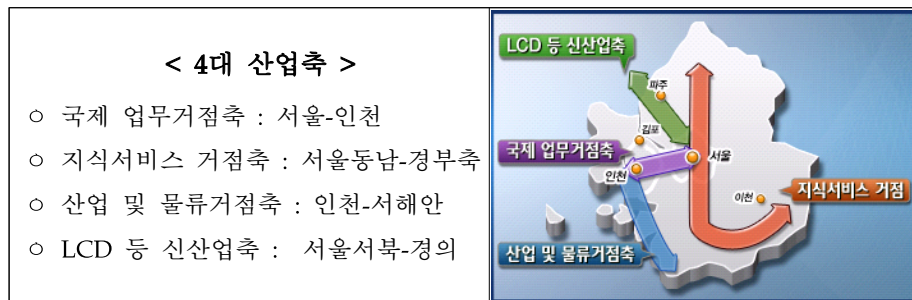
□ 특성 및 성장잠재력

- 33개 기초생활권 < 서울, 경기, 인천 > 서해안 골드벨트, 접경벨트
- 인천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 선도산업 : 해당 없음
- 인재양성 : 해당 없음
- 선도SOC : 제2외곽 순환도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 공간발전구상



6. 강원권

□ 비전 및 목표

비전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	-------------------------

목표	생명·건강산업 육성	다른 광역권과의 연계 강화	녹색 신성장거점 조성	동북아 거점화 SOC확충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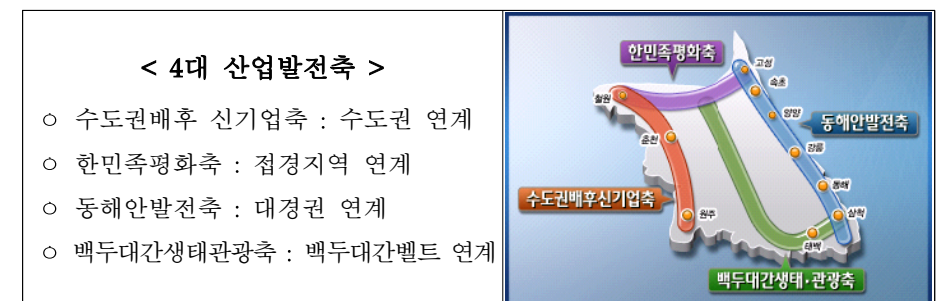
□ 특성 및 성장잠재력

- 18개 기초생활권 < 강원 > 동해안 블루벨트, 접경벨트
- 동해자유무역지역, 관광·문화·생태자원, 초경량광물,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

□ 광역권 주요 선도사업

- 선도산업 : 의료융합, 의료관광
- 인재양성 : 강원대, 한림대
- 선도SOC : 동서2축 고속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원주-강릉 복선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

□ 공간발전구상



2. 재원소요

-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161조 560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
- 이중 국비는 91조 8,042억원으로 전체의 57.0% 차지
 - 국비는 계획기간동안 연평균 5.4% 증가
 - 사업별로는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 소득원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각각 국비의 38.8%, 13.3%, 10.8% 차지
- 지방비는 28조 3,695억원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하고, 민자 등은 40조 8,823억원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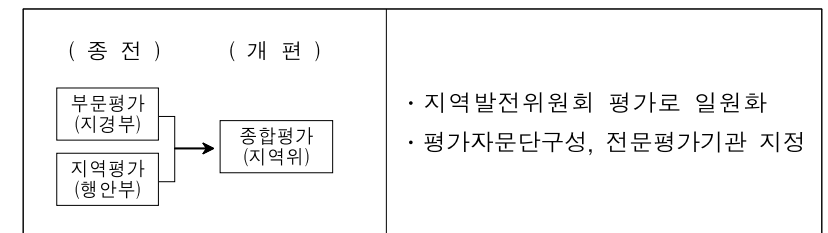
< 재원소요('09~'13년) >

(억원)

	총계	비중	2009	2010	2011	2012	2013	'09-'13년 증가율(%)
총투자소요	1,610,560	100.0	243,316	330,214	373,429	325,842	337,758	8.5
○ 국비	918,042	57.0	156,799	181,948	198,107	187,566	193,622	5.4
○ 지방비	283,695	17.6	52,502	56,387	62,456	58,493	53,857	0.6
○ 민자 등	408,823	25.4	34,015	91,879	112,866	79,783	90,280	27.6

3. 평가체계 구축

- 지역발전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 포괄 보조금제도 도입 등 지역의 재정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제고 및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 기존의 분산된 시행계획 평가체계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
 - 지역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행계획 자체평가(부처)와 광역 시행계획 자체평가(광역위원회)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은 사업기획의 타당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사업목표 달성도·구체적 성과 등
- 평가기능의 일원화와 함께 평가자문단 설치, 평가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평가지원체계를 개선
 -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설치 구성·운영
 - 또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 지정·운영
 -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DB 구축·활용



VI. 지역발전의 미래상

5년후 지역발전의 모습

- 3차원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4만불 시대 토대 구축
- 5+2 광역경제권별 특화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세계적인 장소경쟁(competition of place)에서 경쟁우위 확보
- 163개 기초생활권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고품격 삶의 질 보장
 - 교육·의료·주거·복지·문화 분야별 선진국(G8) 평균 수준 달성
- 4+a 초광역개발권으로 유라시아의 관문국가로 발전
 - 일본·러시아·중국·북한 등과 초국경적 연계벨트 구축

변화의 動因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新지역발전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화와 연계·협력 ○ 자율과 책임 ○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편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신설